

경사노위 불참하고 즉각 대정부 투쟁으로

경사노위는 이전 정부들의 노사정위와 다른가?

국내의 경제 상황이 심상치 않게 전개되고 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 몇 달 동안 급격하게 친기업, 반노동 행보를 노골화했다. 노동자들에게 “대화, 타협, 양보, 고통분담”을 공공연하게 촉구해 왔다.

물론 문재인 정부가 기존 법안을 개정해 경사노위를 개편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는 개악 방안과 시한을 정해 놓고 노동조합들에게 ‘합의’를 압박하는 현실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아예 “양보할 것 없으면 경사노위에 들어올 필요 없다”고 말했다.

경제 상황이 나쁠 때는 노동자들에게 더한층의 양보가 강요되기 마련이다. 보수적 개혁을 추구하는 국제노동기구(ILO)조차 이렇게 조언한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조합은 사회적 협약 체결에서 한 걸음 떨어져서... 노동자의 이익과 권리를 방어하는 업무에 에너지와 자원을 집중시키는 것이 현명할 수 있다.”

또한 경사노위는 여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민주노총은 경사노위에 참가하더라도 본 위원회 18명 중 1명이 될 뿐이다.



경사노위에 들어가면 개악 합의 강요 받을 것

개악에 합의하지 않아도
투쟁의 골든타임 놓친다

1월 25일 양대노총 위원장과 문재인인의 면담은 사회적 대화가 결론이 뻔히 나와 있는 ‘답정너’일 것임을 보여 줬다. 민주노총이 정부 정책에 개입한다는 명분으로 경사노위에 들어가면, 타협과 양보를 강요 받을 것이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이 “노사갈등을 극복하지 못하면 공멸”한다면서, “노사 공동운명체 정신”을 강조한 것도 이를 보여 준다.

최악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경사노위에 참가해 개악에 타협하면, 그것은 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는커녕 개악을 정당화해 투쟁의 발목을 잡는 걸림돌이 된다. “빼앗기면 되찾을 수 있으나, 내어 주면 되돌릴 수 없다”는 이영주 민주노총 전 사무총장의 말을 되새겨야 한다.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서 개악에 합의해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개악안을 둘러싼 논의에 시간을 허비하다가 투쟁 타이밍 놓치고 개악을 방치하는 결과를 낳기 십상이다.

경사노위에서 어떤 개악이 추진되고 있는가?

-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 개악 압박
탄력근로제가 확대되면 사용자들은 자신들이 원할 때 별도의 연장근로 수당도 주지 않고 노동자들을 장시간 부려먹을 수 있게 된다. 이것은 장시간 노동체제의 연장인 동시에, 임금 삭감 공격이기도 하다. 경사노위는 2월 안에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한다.
- 파업권 약화와 노조 무력화 — 개악 압박
김명환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

한 1월 25일, 경사노위 산하 위원회에 파업권 약화와 노조 무력화를 담은 공익위원 안이 제출됐다.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 파업 참가를 노조 규율로 강제하는 것을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로 규정, 유니온숍 제도 폐지, 단협 유효기간 연장 등이 그 내용이다.
노동기본권 보장하러더니 도리어 개악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2월 국회에 노동법 개악안이 제출될 예정이다.

- 앞으로 논의될 주요 의제 — 직무급으로의 임금체제 개편
문재인 정부와 사용자들은 자동 호봉 상승에 따른 임금 인상을 억제하려고 직무급제를 도입하려 한다. 저들은 직무급제가 ‘직무 가치’에 따라 임금을 주는 ‘공정한’ 체제라고 정당화한다. 그러나 직무 평가 자체가 ‘공정’할 수 없다. 사용자가 직무 평가를 주도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정부가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전환자들에게 적용한 직무급(표준임금모델)이 차별 해소는커녕 저임금 고착화를 낳고 있다는 것만 봐도 잘 알 수 있다.

노동자 정치 신문 wspaper.org



노동자연대

구입하고 정기구독·후원해 주세요

대표전화: 02-777-2792 기사제보: 02-777-2791
팩스: 02-6499-2791 이메일: ws@wspaper.org

지금 당장 투쟁으로!

문재인 정부와 친문 인사들, 그리고 김명환 집행부는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참가하지 않으면 주변화되고 개약을 방치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김명환 집행부가 제작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Q&A' 카드뉴스는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서 빠지면 자본 목소리만 들끓을 것이다" 하고 말한다. 반면, "[경사노위는] 민주노총이 제기하는 의제를 전면 확산하는 기폭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들어간다면 정부는 '답정너' 식 결말로 끌고 가거나, 기껏해야 알량한 수정안(최악을 조금만 수정한)에 타협하게 만들려고 할 것이다.

우리에게 경사노위 바깥에서 개약을 방치하는 것과 경사노위 안에서 개약에 합의해 주는 것, 두 나쁜 선택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대중 투쟁으로 노동조건을 지켜내거나 개혁 성과를 쟁취했을 때 민주노총의 위상은 높아졌다. 1980년대 후반, 1997년에 그랬다. 민주노총의 노동개약 저지 투쟁이 박근혜 퇴진 촛불 운동으로 이어졌을 때도 그랬다. 그래서 2017년에 한국노총 조합원이 3만여 명 늘어나는 동안, 민주노총 조합원은 꺾어진 6만여 명 늘었다.

문재인 정부가 2월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노동기본권 약화를 위한 개약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경사노위에 들어갈 게 아니라 즉각 투쟁에 돌입해야 한다. 여기에 2개월째 계속되고 있는 고 김용균 씨 죽음에 항의하는 운동도 결합해 더욱 확대해야 한다.

경사노위 불참이 결정됐는데도 즉각 투쟁 나서서 개약을 막는 힘을 보여 주지 않으면, 대화를 거부했다는 공격에 방치돼 스스로 무기력하게 될 수 있다.

이번 대의원대회가 경사노위 불참뿐 아니라 즉각적인 대정부 투쟁을 결의해야 하는 까닭이다.

김명환 위원장-문재인의 세 차례 만남, 무엇을 남겼나?

노동개약 의지 표명하는 문재인에 악수만 해 준 꼴

민주노총 위원장의 대통령 만남은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그러나 문재인이 노린 것은 악수하며 웃는 사진(정치적 상징 효과)이었을 뿐, 분명한 개선 약속을 전혀 없었다. 오히려 노동개약 추진 의지를 거듭 표명했고 실제 개약을 강행했다.

2018년 1월 19일, 청와대 만남 이후

- 근로기준법(주52시간제) 개약 • 한국GM · 조선업 등 구조조정 •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약
- 공공부문 정규직화 누더기화 • '혁신 성장' 강조 • 의료 영리화 추진

2018년 7월 3일, 비공개 면담 이후

- 신자유주의적 규제완화(규제프리존)법 통과 • 제대로 된 공공부문 정규직화 외면
- 고 김용균 사망 • 제주영리병원 허용 • 탄력근로제 확대 추진 • 광주형 일자리 추진
- 노동기본권 후퇴 추진(노조 무력화, 파업권 약화 등) •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약 추진

2019년 1월 25일 청와대 만남 결과

고 김용균 죽음 해결 (진상규명, 정규직 전환, 인력 확충 등)	답변 회피. 유족은 빈손 만남 이미 거부	"언제든 유가족 만나겠다"
탄력근로제 확대 개약 중단	거절. 개약 기정사실화	"경사노위에서 합의하자"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약 중단	거절. 개약 기정사실화	"이원화(개약) 해야 한다"
ILO 협약 비준, (한정에 발의) 노동법 개약 철회	개약(노조 무력화, 파업권 약화) 추진 의사 피력	"필요(개약) 입법 동시 추진"
공무원노조 해고자 원상 회복,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철회	거절	"전교조는 국회 입법 후에"
제주 영리병원 허가 취소	사실상 거절	"우려 알고 있다"
정례 노정 협의, 산별교섭 토대 구축	협박(경사노위 안 들어오면 대화 어렵다)	"경사노위 정상 가동과 함께 이뤄져야"

각종 '조건부' 참여론 - 미워도 다시 한번?

오류 답습 말고 경사노위 불참을 결단하자

- **정부가 신뢰 회복 조치 하면 참여하자?**
- 문재인 정부가 신뢰를 회복할 만한 조치로 탄력근로제 · 최저임금 개약 중단, ILO 협약 비준 등을 약속하면 경사노위에 참여하자는 제안.
- 그러나 조건부 참여론은 유통기한이 지난 철 지난 제안. 이미 지난해부터 이런저런 조건부 안이 제시돼 왔지만, 정부는 보란 듯이 개약을 거듭.
- **충분히 확인된 정부의 개약 의지**
- 김명환 집행부는 최저임금, 노동시간, 신

- 회회복 조치 등을 여러 차례 조건부로 제시.(2018년 1월 노사정대표자회의의 참여 결정 시, 8월 노사정대표자회의의 복귀 결정 시 등)
-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거듭 개약 강행.
- **각종 '조건', 말뿐인 엄포로 전략해 온 1년**
- 민주노총 지도부, 2018년 5월 노사정대표자회의의 불참 결정하면서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촉구. 그러나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8월 노사정대표자회의의 복귀.

- 김명환 집행부, 2018년 4월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경사노위)는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 정책 폐기"를 전제로 해야 한다고 강조. 그러나 지금 노동시간 유연화(탄력근로제 확대)가 추진되는데도 경사노위 참여 주장.
- **선 참여, 개약 시 탈퇴 안은 더 문제**
- 정부에게 일방적 개약 아니라는 정당성만 줄 뿐.
- '개약 시 재논의(또는 탈퇴)'는 정확히 1년 전에 했던 결정. 그 이후 어떤 일이 벌어졌

- 는지는 위에서 지적. 이것을 왜 또다시 반복해야 하나?
- **반복된 '조건' 제시 - 우리 자신을 지치게 할 뿐**
- 투쟁 기회 허비하고, 조합원들의 투지를 떨어뜨림. 정부의 개약 의지 확고한데 '두고보자'는 말만 반복하는 지도부를 믿고 싸우기 어려워짐.
- 경사노위 불참을 명확하게 결정하고 대정부 투쟁을 결의할 때만 조합원들에게 확신을 주고 투쟁에 나서도록 독려할 수 있다.